

2011. 10. 25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

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KDI's 40th Anniversary
The Korean Economy in the Age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:
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

- 기간: 2011년 10월 24(월) ~ 25(화)
- 장소: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 볼룸(B1)
- 주최: KDI(한국개발연구원)

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세션 6. 노동시장·교육제도 및 인적자본

[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]

□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 한국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연령은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활동 참여율 증가에 기인함.

○ 특히 여성들의 사회활동 의지가 높아지면서 첫 출산 시기가 늦춰짐.

□ 출산을 저하 현상을 경험한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수준

-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룸.
- 전문직 여성과는 달리 일반 사무·생산직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커리어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.

□ 여성의 재취업률은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, 고졸 여성의 재취업률은 유연성을 보이는 반면, 대졸 여성은 재취업이 쉽지 않음.

- 출산 후 재취업을 원하는 대졸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가 높은 곳은 대부분 저임금 단순직종이기 때문에 대졸여성의 흥미를 끌지 못함.

□ 여성 사무직 종사자수가 30대부터 감소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직업 구조에서 찾을 수 있음.

- 한국의 직업 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며, 특히 직장 내 성차별과 남녀 간 임금 차이 문제가 심각함.
 - 일반 사무직의 경우 연령대가 높은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데, 수요측면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고용자들이 연령이 높은 여성 사무직 근로자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

□ 한국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보전하기 위해서는 1)지식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과 2)육아 보장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.

- 지식경제로 전환해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함.
- 국가 차원에서 육아보장 시스템을 마련해 일하는 여성들이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.

□ 한국인들의 근무 시간은 OECD 국가 평균보다 30% 가량 긴 반면, 시간당 임금은 낮은 편임.

○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률이 높지 않고,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평균 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남.

□ 특히 미국의 경우 고임금자 근로시간이 긴 반면, 한국의 경우 저임금자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됨.

○ 과거 한국의 경우 20~30대 젊은 여성들이 공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 했지만, 199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퇴직한 40~50대가 저임금층으로 유입.

○ 한국 근로자의 긴 근무시간은 초과근무수당(인센티브)을 통한 소득 보전 효과 추구 경향에서 비롯되었음.

- 근로자들은 높은 집값과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오랜 시간 근무 하고 이로 인한 인센티브를 얻어 소득을 보전하고자 함.

□ 근무시간 증가로 한국 근로자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커지고 있으며, 특히 과도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는 산업 재해 증가로까지 이어짐.

□ 업종별 소득을 보면,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기업의 근로자 실질 소득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, 소기업 및 영세업자의 실질 소득은 정체해 있음.

○ 전자, 자동차, 화약 분야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R&D 지원 강화로 대기업의 생산성 및 시장 점유율이 증가해 수익이 확대되는 반면, 다른 산업에 대한 R&D 지원은 부족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지 못하는 데 직접적 원인이 있음.

□ 교육분야에 있어 한국 정부는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, 공교육 제도 개선 등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.

-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함.
- 특히,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해 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위한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함.
- 또한 학자금 용자, 장학금제도, 세제개혁 등을 통해 대학 교육이 점차 보편화 되는 상황임에도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임.

[발표: 리차드 프리먼 하버드대학교 교수]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2008년 4/4분기와 2009년 1/4분기의 GDP와 수출량이 감소하는 경제 불황을 겪은 바 있음.
-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 IMF와 미국 재무성이 한국에 긴축을 요구해 불평등이 심화하고,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감소하는 한편, 노사관계가 악화되었으나,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 시 한국은 인적 자원과 경제 정책 시행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고, 동시에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도 줄였음.
- 한국이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상실한 120만개 일자리의 대부분은 일용직, 파트타임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었으며, 정부는 실업률을 억제하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 운동과 같은 유럽식의 공공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음.
-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규직의 수는 비정규직 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, 비정규직의 비율은 과거보다 감소함.
 - 불경기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노동력의 약 2.2%가 새로 창출된 임시 공공분야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미국으로 치면 3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 된 것과 같음.

-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서비스 부문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하며, 높은 품질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.
 - 선진국 수준의 제조업을 보유한 반면, 서비스 부문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 현실의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, 자영업의 낮은 생산성, 서비스 부문에 집중하지 않는 정부에 있음.
- 대학 졸업자들의 능력과 시장에서의 수요 사이의 매칭도 필요
- 여성의 사회 진출 문제는 서비스 부문 강화, 지식 기반 분야의 비교우위 확보, 노동시장과 수입 양극화를 감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.
 - 한국 노조에 자영업자나 영세업자 같은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로, 복수 노조, 노조 간부 유급 가능화 등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하며, 정부는 노조에 불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함.
-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비공식 시장의 성장도 중요한데, 예전엔 공식 부문 감축만을 정부에 조언하던 OECD도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비공식 부문, 서비스 부문 지원을 추천함.
 - 이는 은퇴 후 공식 시장에서 비공식 시장으로 옮긴 뒤 저임금, 저생산성의 업무를 하게 되는 퇴직 정책과 연관이 있음.
- 이 밖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강화, 재벌의 정실 자본주의 약화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함.
- 세계는 한국의 경제회복 및 지속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음.

[토론: 피터 터가이스트 前 OECD 고용교육노동사회국장]

- 노조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에 관한 프레드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지만, 최근 노조들이 비정규직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, 실질적인 교섭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볼 일

□ 한국은 국제 노동 기준에 맞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, 특히 ILO 노동권 선언의 주요 일부인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호해야함.

○ ILO, OECD 가입 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의 노동권 보호 수준이 문제가 된 데 대해 한국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.

○ 당시 전국적인 노조는 한노총뿐이었으며, 민노총은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.

○ 한국은 ILO 노동권 선언 중 4개만 비준함으로써 OECD 국가 중 비준율이 가장 적음.

□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단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었으나, 2010년에 복수 노조를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킴.

○ 이는 한국이 97년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 세 번의 유예 끝에 나온 것으로 가입 시점부터 13년이나 지난 후의 일

○ 한국은 여러 번 국제 사회에 유예를 요청했는데, 그 때마다 민노총을 제외시키고 한노총과 방문함.

□ 한국의 단결권 지연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 때문으로, 한국 대기업의 노조 대표수가 줄어들고 있음.

○ 프랑스, 독일과 비교한 결과, 1000명을 기준으로 한국은 11명, 프랑스는 20명, 독일 12명, 대기업이 10만 명일 때 한국은 18명 상한, 프랑스 80명, 독일 57명으로 큰 차이가 있음.

○ 노조비를 모아 대표를 선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.

□ 반면 한국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 단결권, 단체교섭권을 보장할만큼 발전했으나 아직 한계가 있음.

- 노조 간부들이 매년 감옥에 가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한 현상으로,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법으로 다루는 데서 야기됨.
-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것도 포함될만큼 불법행위의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관행은 종식 시켜야 함.

[두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과장]

- 중국 근로자의 근무시간도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길며, 자영업자가 많고, 최근 출산율이 저하되는 등 한국과 중국의 노동시장 부문에는 많은 유사점이 존재함.
- 한국은 노동과 관련해 첫째, 여성문제와 노령화 문제, 둘째, 노동시장 기능 개선, 셋째, 노동 생산성 향상 등 세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함.
 - 대학과 기업을 서로 연계하거나 대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이루도록 촉구함으로써 노동시장 기능을 개선하고, 서비스 분야에 R&D를 집중해 노동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. .
- 한국의 성공사례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개도국에 모범이 되고 있는데, 중진국 단계를 넘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 부문의 개선
 - 현재 중국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은 한국의 1970년대 수준과 비슷하나 그 성장세는 매우 빠른 편임.
- 중국 고등교육은 지난 10년간 크게 성장해 대졸자의 수가 현저히 증가한 반면, 대졸자들을 수용할 직장이 충분치 않고 대졸임금이 비숙련 육체노동자들의 임금과 비슷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- 중국은 최근 성장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지난 10년에 비해 하락하고 있는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임.
 -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중진국 트랩을 극복,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할 것임.